

정책브리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재·소비 재·유통분야의 중국에 진출한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급 투자유치로 中서 5억달러 투자신고

산업부, 中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부가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관급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5억 달러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올해 들어 회복세인 중국의 한국 투자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장관급의 대중 투자유치는 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JCET(반도체), EVERCARE(바이오), 베이징자동차(미래형자동차), 스피어헤드(콘텐츠) 등 유망 분야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이들에게 한국의 투자 매력을 설명하고 합작법인 설립이나 기술제휴 등을 바라는 중국기업과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을 연결해줬다.

백 장관은 "동북아에 전에 없는 긴장완

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이 한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될 미래 지향적 관계발전을 뒷받침할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중국 투자가로부터 약 5억 달러(약 5350억 원)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투자 분야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바이오,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했고 투자 방법도 단독투자, 합작법인, 지분투자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중국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하도록 밀착 관리하고 이를 통해 4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 장관은 이날 지난 달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재보험 급여 최저임금 이상 보장 유족자녀 수급연령 19→25세 연장

노동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압류불가' 전용 수급계좌 운영 장해·사망 급여 소멸시효 연장

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방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의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복지부, 9억 투입... 바이오 창업 지원

'김해의생명센터' 주관기관 선정

보건복지부가 바이오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역 클러스터-병연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국비 4억원에 김해시·경남도 등 주관기관 5억 원을 더해 모두 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임상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클러스터가 지역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먼저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공간 입주 지원,



시설·장비 이용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임상시험 컨설팅,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포럼 및 세미나 등 지역 네트워크 축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협력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설치된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 본부 내 과 단위 부서로 신설돼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농장동물 등 마릿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8%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도 2015년 251만 마리에서 지난해 308만 마리로 증가했다.

동물복지정책팀은 앞으로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공군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6일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까지 '거점 유통센터' 10곳 개설

해수부, 수산물 가격 등 수급관리 유통 기반마련 등 4대 전략 제시

앞으로 수산물 처리 전 과정의 위생 상태를 높이는 '거점형 청정 위판장'이 전국 10곳에 조성된다. 또 정부가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 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수립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분야는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해양수산부는 5일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 유통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양육-선별-위판-배송)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수산물 거점지역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에게는

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거점 유통센터(FPC)를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자 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산지위판장-FPC-FDC-소비자(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종별·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미끄럼, 뒤집힘 등)을 개선한 어상자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